

# “유명무실한 원산지 표시제 개정돼야”

-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든 식당으로 확대요구”
- ‘원산지 표시제 확대’ 입법공청회 개최



◀ 유명무실한 현행 원산지표시제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확대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6월 14일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다

- 흥 보 부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한나라당, 안동)이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 경북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확대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상 음식점의 범위를 현행 영업장 면적 300㎡이상에서 면적을 줄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고기, 쌀, 수산물, 닭고기, 김치류 등에 대해서도 원

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과 지자체에 한정돼 있는 단속권을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으며, 양돈·한우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식육업체 등 지정토론자의 의견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 300㎡이상 전국 2% 불과... 대상 확대 시급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최규섭 교수는 “2007년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57만

3천6백39개 중 원산지표시 의무 영업점인 300㎡ 이상 음식점은 1만2천987곳으로 전국 음식점의 2%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기준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만약 단속을 피해 속여 파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많은 음식점이 원산지둔갑판매를 실시할 것”이라며 “음식점에서 속여 팔기를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농관원도 단속권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야

정승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현재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은 전국에 퍼져 있는 농관원의 단속직원들이 실시하고 있지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없어 유통과정에서 음식점의 위반 단서를 잡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농관원에 까지 단속권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는 제도 도입자체만으로도 제도 효과가 크다면, 원산지표시제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 시중유통 육류의 57%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제 포함되어야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57%가 돼지고기다.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직한 판매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은 농업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는 농민들을 우대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하나 전면 시행하는데 장벽이 너무 많다”며,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 우리 양돈 농가들이 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또한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대해 평수 제한을 없애는 등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귀순 안동 소비자단체 대표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축산물의 범위도 모는 농축산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최기호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장은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및 개정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올해 쇠고기, 내년 쌀 등 단계적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확대 실시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 DNA 검사방법 등 유통 감시방법의 미비가 전면 실시의 걸림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입법 발의를 주도한 권오을(한나라당, 농해수위원장) 의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며,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농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정부는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농촌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축산인 여러분이 직접 알리는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양돈**